

2012 6/4 금융위원회 간부회의 말씀내용

I. 유럽 재정위기 전개양상에 대한 평가와 영향

1.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평가

- ☐ 2009년 10월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유럽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또 재정위기에서 은행위기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 스페인의 은행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 유럽 사태가 악화일로에 있는 이유는 EU 단일통화체제의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EU 중심국들이 그리스 문제를 조기에 진화화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임
 - 2008년 리먼사태시 미국은 강력한 정부 리더십을 통해 신속하게 위기대응방안을 수립·집행하는 등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처한 바 있음
 - 유럽의 경우 ①국가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정치적 리더십도 발휘되지 못하여 그리스 재정위기에 속도감있게 대응하지 못하였고, ②위기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하였음
- ☐ 그리스 사태가 조기 진화되지 못하는 등으로 이제 스페인으로 위기가 전이될 상황에 있는데, 스페인은 경제규모가 그리스의 5배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는 예상을 초월할 것임
 - * '11년 GDP(조불): 스페인 1.5(약 1억유로), 그리스 0.3, 한국 1.1
유럽계 은행의 스페인 익스포저: 5,129억불(그리스 익스포저 905억불의 6배)
 - 특히 스페인의 은행위기가 촉발되면 그 자체로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실물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파급영향이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임
- ☐ 유럽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위기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해 주기를 당부하고자 함

2.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영향 :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변화

- 이번 유럽사태는 앞으로 자본주의 역사의 흐름속에서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함
 - 우선 충격의 크기 측면에서 리먼사태와 이후의 유럽 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대공황이후 자유방임주의를 대신하여 수정자본주의로 경제운용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처럼 유럽사태를 계기로 1970년대 이후 자리잡은 신자유주의가 이제는 새로운 경제·금융 패러다임 (예: 자본주의 4.0)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기존 신자유주의를 움직이는 패러다임이었다면
 - 앞으로는 공고한 시장안정과 질서를 전제로 자율을 추구하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된 사회적 책임 등이 강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갈 것임
- 금융부문에서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의 기류를 적극 수용하여 대응해 나가야 함
 - 외부로부터의 위기로 인한 강한 충격에도 금융시장을 지켜 나가는 등 시장안정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해 주기바람
 - 또한 금융소비자·투자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 강화,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사회공헌·사회적 책임 강화가 강조되는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기바람

Ⅱ. 우리의 대응자세와 정책대응 방향

1. 그동안의 위기대응 노력

-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금융부문은 지난해부터 '97년 외환위기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그 어떤 부문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잠재불안요인 해소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였음
- ① 금융산업의 최대 부실요인이었던 저축은행에 대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
 - 지난해 상반기에 부실 우려가 큰 8개 저축은행을 우선 정리하고, 이후 85개 전체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시장의 불신이 저축은행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
 - 금년 5월에는 당시 경영평가결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들을 구조조정 함으로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일단락하였음
 -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적 투명성과 결과적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 저축은행 자산 총액의 40%에 달하는 20개의 저축은행을 공적자금을 조성하지 않고 정리한 것임
- ② 대내외적으로 잠재불안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기틀을 마련함
 - 가계부채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누적된 문제로, ①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②대출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이 문제의 핵심임

참고자료

- 지난해 1월부터 정부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3월 DTI 규제 원상회복, 4월 서민금융 대책을 통한 서민지원 강화, 5월 신용카드 대책을 통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억제 조치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기초 여건을 조성
 -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제 가계 부채에 대해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마련하였음
- ③ 시장불안시 주가폭락 등 과도한 시장변동을 초래해 온 레버리지에 의존한 자본시장의 버블요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예방조치도 소리없이 취해 왔음
- 증권사 콜차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3.9조원('11.5월)에 달하던 증권사 콜머니를 8.2조원('12.5월)으로 감축
 - 신용융자 보증금률 상향조정 등을 통해 신용융자 잔고를 38.5% 축소 ('11.5.2 6.9조원 → '12.5말 4.3조원)
 - 금년 3월에는 FX마진 거래 증거금 인상, ELW 시장 건전화 방안 등을 통해 자본시장내 투기성 거래를 억제
 - * ELW 거래대금(일평균) : ('11년)1.3조원 → ('12.5월)714억원, △93.9%
 - * FX마진 거래대금(월평균, 억달러) : ('11년)555 → ('12.5월)188, △66.1%
- ④ 한편 어느나라보다도 먼저 작년 2분기부터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중장기외화자금 조달을 확대토록 하는 등 선제적인 외환건전성 제고노력을 통해 위기조짐이 마다 반복되었던 외환부문의 대응능력 취약 문제에 사전적으로 대응해 왔음
- * 국내은행 장기외화차입금 비중(%) : ('08말)49.9 ('09말)65.6 ('10말)70.6 ('11말)73.7
 - 원화부문에서도 BIS비율, 예대율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선제적으로 확충해 왔음
 - * 은행 BIS비율(%) : ('07)12.32 ('08)12.31 ('09)14.36 ('10)14.55 ('11)13.96
 - * 은행 예대율(%) : ('07)122.2 ('08)118.0 ('09)112.4 ('10)98.2 ('11)96.5 ('12.3월)95.3

⑤ 이제 우리 금융시장과 산업의 위기대응능력은 과거 어떤때 보다 강한 체력을 갖고 있음

- 이러한 위기대응능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세계 금융시장의 동요 속에서도 한국금융시장의 안정을 지켜낼 수 있었고 앞으로 간단치 않은 위기상황에서도 금융시장 안정을 지켜나갈 안전판이 될 것으로 확신함

2. 앞으로의 대응자세

- 여러분들은 그동안 시장과 산업으로부터의 반발이나 비판을 감수하면서 불철주야 묵묵히 헌신해 준 바 있으나, 여러분의 준비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응해주기 바람

- 군인은 평시에는 실전에 대비한 훈련과 경계에 충실해야 하고 전시에는 실제 전장에서 전투를 해야 함. 여러분들이 그동안 위기상황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상황전개에 따른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 왔지만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드리운 유럽發 위기의 암운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실전에 대비해야 함

- 군인이 아무리 훈련을 잘 받고 경계와 대비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꼭 이기는 것은 아니며, 훈련과 준비는 전승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임

- 급변하는 실제 상황에서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전략,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신속한 작전수행이 승패를 좌우하게 됨

- 위기대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금융당국이 아무리 위기 발생에 충실히 대비했다 하더라도 급박하게 변화하는 위기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위기 발생시 시장안정을 위한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이 즉각 작동될 수 있어야 함

3. 향후 정책대응 방향

① 자본시장 변동성 완화

- 우리 자본시장은 높은 대외 개방도와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으로 인해 외부충격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2011년말 코스피시장의 외국인 투자비중이 32%, 개인 투자 비중이 20.7%에 달해 증시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7,500억불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은 국내 경제·금융 상황에 비해 과도한 시장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앞으로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투기적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도 가일층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짜점심”을 없애 나가야함
 -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조기 시행하는 등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하여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해야 함
 - 또한 ELW, FX마진거래 등 자본시장 내에서 투기성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감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정 수준에서 제어해 나가야 함
- 이와함께 외국인·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시장구조 개선과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는 초장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등을 통해 자본시장 수요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
 - 초장기 금융·투자상품은 점점 더 늘어나는 개인의 금융자산을 흡수하여 시중자금의 선순환에 기여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금융 수단으로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장치로도 활용하여야 함

②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

- ☐ 금융뿐만 아니라 실물부문의 대외의존도도 높은 우리 경제는 유럽사태 확산시 실물부문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
- ☐ 위기시 가장 먼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서민·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강화될 필요
 - 우선 서민 금융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금융산업내에 다양한 금리 스펙트럼을 갖추어 각각의 신용수준에 상응하는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와 함께 3대 서민금융 등 정책금융지원도 더욱 활성화해야 함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실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유효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③ 잠재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지속 대응

- ☐ 가계부채, 외환건전성 등 금융시스템 안정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관리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다중채무자·자영업자·고령자 등 세부요소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세부사항별로 분석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
 - 또한 외환건전성은 상황별 외화유출가능성·규모를 측정하여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이 밖에도 상정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